

비리왕초 이견희

비리 재판기 이명박

떡값 대통령 노무현

처벌하라

반부패 · 반신자유주의 후보 권영길을 지지하라

삼성 · BBK 비리 척결!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파병 재연장 반대!

일시: 12월 1일(토) / 시간 · 장소: 추후 공지
주최: 2007 범국민행동의날 조직위원회

제2차 범국민행동의날



긴급 옥중 인터뷰
-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삼성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3 · 12면



민주노동당과 2007 대선
- 코리아연방공화국 논쟁
- 사회당의 우경화 비판
6~7면

BBK와 '비리재판기' 이명박의 위기

5면



국제
- 프랑스 노동자 · 학생 투쟁
- 제국주의와 소말리아의 비극
4면

정성진 칼럼
- 그람시와 21세기 혁명

8면

임시지옥
사교육비 증대의 해결책
- 하재근 학벌없는사회 사무처장
5면

여성 칼럼
- 낙태는 여성의 권리

9면

〈맞불〉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맞불〉 온라인 기사

불발로 끝난
철도 · 화물 공동 파업
왜 철도노조 · 화물연대 지도부는 막
강한 힘을 써보지도 못하고 파업을
접었는가?

.....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내 영혼이 감당 못할 정도다.
... 검찰은 ‘떡값’ 수준이다.
0하나가 더 붙는 다른 기관들
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안 나
왔다. ... 부자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 전주교정의구현사제단
김인국 신부

〈매일경제〉 사회부장 이동주:
“자기 침실과 욕실에 CCTV를
설치할 용기가 없다면 진실을
모조리 다 밝히라고 떠벌리길
삼가야 한다. ... 우리 모두가
관음증 환자가 될 수 있다”
〈머니투데이〉 편집국장 박종면:
“과거 사랑한 남자들의 치부를
온 세상에 까발리고 있는 어느
여자 연예인의 얼굴이 자주 오
버랩 되는 것은 왜 일까요. ...
제가 변태인가요.”

— 김용철 변호사를 공격하는 언론들

“뉘지게 맞을 짓을 한 것은 이
회창뿐만 아니다. 이명박도 뉘
지게 맞기 전에 후보직을 사퇴
해야 할 것이다.”

— 민주노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대통합이 기여할 게 아주 없는 것
은 아니다. 다행히 버려야 할 모든
것들이 이 한 바구니에 담기게 되
었기 때문이다.”

— 〈경향신문〉 이대근 칼럼니스트

“광장히 오랫동안 아주 썩어 있었
는데 해가 갈수록 심해지더라. 로비
스트한테 ‘내년엔 좀 힘들겠네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렇지 않아.
문제없어. 우리는 신뢰관계라서 다
돼’라고 하더라.”

— 외교 입시학원 강사의 고백

“한미FTA 협상의 타결을 앞두고
정부측으로부터 아주 매력적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일반 광고비
의 10배 가까운 액수를 제시하면서
한미FTA 찬성 광고를 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 〈프레시안〉 박인규 발행인

이정원
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정부가 인종차별적인 이주 규
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포춘〉
지 등이 선정한 3백대 기업 출신
인사와 세계 2백대 대학 출신은
언제라도 입국 가능하고 영주권
을 쉽게 얻을 수 있게 하는 반면,
더 나은 삶을 찾아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결혼이민자·난민에 대
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려 한다.

법무부가 11월 8일 입법 예고
한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은 미등
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권한
강화와 난민 공격을 핵심으로 한
다.

법무부는 파렴치하게도 수십
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에 이
르게 한 인간사냥식 단속을 법률
로 정당화하려 한다. 개악안이 통
과되면, 공장이나 주거지에 영장
없이 들어가 단속할 수 있고, 출
입국법 위반자로 의심되면 언제
라도 멈춰 세워 단속할 수 있다.

법무부는 “난민 인정에 대한
남용적 신청 각하” 조항도 신설
했다.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사
람이 같은 사유로 재신청하는 경



출입국관리법 개악은 인간사냥식 단속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우가 대표적 각하 사례다. 전체
난민 신청자 1천3백87명 중 62
명만을 난민으로 인정(2007년 6
월 현재)했으면서 재신청마저 말
라는 것이다.

‘강제퇴거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도 각하 사유가 되는
데, 이것도 매우 위험하다. 한국
체류 중에 얼마든지 난민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서 버마 군부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했던 버마 이주노동자들 몇

명은 얼마 전 버마에 돌아가다 입
국 심사에 걸려 구속됐다. 이런
경우에 난민 신청하는 것도 막으
려는 것이다.

가짜

이 조항들의 신설은 ‘가짜 난
민’이라는 편견을 부추겨 난민
심사를 강화하고 난민 인정률을
더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다.

법무부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국적 취득도 어렵게 만들려고
필기시험을 부활하고 면접을 강
화하려 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
는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국내 이
주자들 다수를 더욱 어려운 처지
로 내몰 것이다. 까다로운 입국
심사 통과와 체류 자격 취득을 위
해 더 비싸고 위험하고 불법적인
수단들이 늘어날 것이다.

정부의 이런 위험하고 악랄한
시도는 좌절돼야 한다.

‘범경찰폭력의날’을 자축하는 정부



시위대 위협, 물대포 살포, 폭력 진
압 등으로 참가자 60여 명이 고막
이 찢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며 머

리가 깨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지나가던 무고한 시민이 폭행을 당
하기도 했다.

전국 곳곳에서 경찰의 불법과 폭
력이 자행된 그야말로 ‘범경찰폭력
의날’이었다.

경찰은 상경하는 대회 참가자들을
막기 위해 가택연금, 출발지 봉쇄,
고속도로 진입로 봉쇄는 물론이고
참가자들을 태우기로 한 버스타사에
운전면허를 취소하겠다는 협박 공문
까지 보냈다. 경남 의령에서는 경찰
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권총 살해 위
협까지 가했다. 이런 막가파식 탄압
을 뚫고 4만 명이 집결한 범국민행

동의날은 명백히 성공한 것이다.

11일 이후에도 경찰의 탄압은 계
속되고 있다. 대회 당일 연행된 사
람 중에서 3명이 구속됐다. 지금까
지 소환자도 90여 명(민주노총 16
명, 광주·전남 32명, 경남 50명)
에 이르는데, 헬기에서 채증한 사
진으로 더 확대될 전망이다.

범국민행동의날 조직위원회는
경찰 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모
아 국가인권위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또 전국민적 분노를
나고 있는 ‘삼성 비리 척결’을 주요
요구로 추가해 12월 1일 제2차 범
국민행동의날을 열기로 했다.

저들의 탄압에 단호하게 맞서며
더 강력한 제2차 범국민행동의날
을 건설하자.

이정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으려는 노무현

지난 11월 13일 노무현 정부
는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이하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법’과 함께 통과
된 ‘노사관계 선진화법(일명 노
사관계 로드맵)’에 바탕을 둔 것
이다.

이 시행령은 각종 독소조항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

권을 2중, 3중으로 제약하는 내
용을 담고 있다.

먼저 필수공익사업장을 확대
하고 필수유지업무를 포괄적으
로 지정해 합법 파업의 여지를
최대 한 좁혀 놨다. 노동부 분석
을 보면, 철도사업은 전체 업무
의 50퍼센트, 발전사업은 60퍼
센트, 송·변전사업은 50퍼센
트, 가스사업은 70퍼센트, 혈액
공급사업은 80퍼센트, 우정사

업은 90퍼센트가 필수유지업무
대상에 포함된다.

또,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
하더라도 파업 참가자의 최대
50퍼센트까지 대체 인력을 투입
할 수 있게 해 놓았다. 긴급조정
(강제중재) 장치도 보존해 정부
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파업 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해
놓았다.

국내외의 비난 때문에 희대의

악법인 직권중재제도를 마지못
해 없애면서도, 조삼모사식 온
갖 개악을 통해 파업권을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다. 특히 대대
적인 공기업 사유화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앞두고 공공부문 노
동자들의 손발을 묶어두려는 것
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이런
공격이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
은 없다. 노동자들의 저항 때문

에 노무현 정부는 이 법을 시행
령 형태로 확정하는 데만 몇 년
이 걸렸고, 이 법이 적용되는 것
을 보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비정규직 악법도 뉴코아·이
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좌초
위기를 겪고 있는데, 하물며 잘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을 겨냥
한 ‘노사관계 로드맵’이 ‘로드
맵’대로 가기란 쉽지 않을 것이
다. 정규직 활동가·노동자들은
강력한 투쟁으로 노무현 정부의
시행령을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던져 버려야 한다.

조명훈

이건희와 ‘삼성 독재’의 앞잡이들

전지윤

2년 전 삼성 X파일을 폭로한 이상호 MBC 기자는 “대한민국은 삼성 독재 치하에 있는 형식상의 민주주의”라고 말한 바 있다.

‘삼성 독재’의 앞잡이 노무현은 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발의되자마자 어깃장을 놓았다. “국가 기본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도 들먹였다. 곧이어 전 청와대 반부패 담당 비서관에게도 삼성이 ‘떡값’을 돌린 게 드러났다.

‘삼성 맞춤형’ 대선후보 이명박을 앞세운 한나라당도 특검법 통과에 다리를 걸었다. 결국 특검법은 물건너가는 듯하다.

나아가 한나라당과 통합신당은 임채진 이 검찰총장으로 ‘적절’하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떡값’ 검사로서 서울지검장 때 이견희 소환을 막아섰던 임채진이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임채진이 검찰총장이 되면 삼성 수사는 절대 못한다”고 경고했었다.

결국 삼성 비자금 사건과 BBK 등을 계기로 정동영이 펼치려던 ‘반부패 전선’은 괴상한 모양새가 됐다. ‘전선’을 형성해보니 청와대와 범여권은 ‘반부패’가 아닌 ‘부패’ 쪽에서 있는 것이다.

삼성 비자금 문제에서 참여정부는 도저히 자유로울 수가 없다. 밝혀진 바로만 2002년 대선 때 노무현의 ‘오른팔’ 이광재는 삼성에게 7억 원을 받았고, ‘왼팔’ 안희정은 30억 원을 받았다. 이 돈은 행방이 아리송한 삼성 채권 5백억 원의 일부일 뿐이다.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광재가 하는 말은 삼성이 하는 말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었다.

임기 초에 노무현은 이견희 처남 홍석조를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해 검찰 ‘개혁’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은 이제 “삼성 계열사”로 불릴 지경이다. 노회찬 의원도 “검찰의 인사권자는 사실상 삼



“삼성의 불의와 관련되지 않은 공기관과 인사들은 거의 없다”(사제단) – 노동자·민중이 정의를 위한 ‘대수술의 칼’을 잡아야

성”이라고 지적한다.

이견희 봐주기에 힘써 온 검찰총장 정상명, ‘떡값’ 청렴위원장 이종백, 전 삼성 그룹 법무실장 이종왕은 모두 노무현과 사시동기 모임인 ‘8인회’ 소속이다.

더구나 검찰은 “삼성이 관리하는 작은 조직”(김용철 변호사)이었을 뿐이다. 청와대, 재경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이 바로 ‘삼성이 관리하는 큰 조직’들이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하 사제단) 김인국 신부도 ‘김용철 리스트’에서 현재 밝힌 것은 “10퍼센트”라고 말한다. “부패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고 나니까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멀 것 같다.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다”고 했다.

이 거대하고 더러운 그물망을 통해 이견희는 단 16억 원의 세금만 내고 수십조 원의 재산과 경영권을 이재용에게 불법 세습할 수 있었고, 금산분리 폐지와 탐욕스러

운 영토 확장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이제 이견희와 공범들은 X파일 때처럼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대수술의 칼’

김용철 변호사는 ‘범죄를 폭로한 죄’로 비난받고 있다. “꽃뱀과 하등 다름 게 없는 자”(〈동아일보〉), “산업 스파이”(〈헤럴드경제〉), 심지어 “젊은 아가씨 치맛자락을 허락없이 들춰보는 듯한 재미에 빠져”있는 “폭로꾼들이야말로 ‘한국판 탈레반’”(〈매일경제〉)이란단다.

경제5단체들도 “대외신인도 하락과 기업 의욕 상실”을 들고 나왔다. 심상정 의원의 지적처럼 “편법, 탈세, 비자금 살포를 용인해 줘야 기업 의욕이 살아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범죄 ‘의욕’일 뿐이며 이런 비리·무노조 경영의 희생자는 노동자들이었다. 삼성 SDI 해고자 최세진 대표 표는 “그 돈[‘떡값’]이었다면 몇천 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나 삼성 무노조 경영 ‘신화’는 저항의 ‘신화’이기도 하다. 삼성생명, 삼성 SDI, 삼성에스원, 신세계이마트 등에서 끝없이 몸을 던지며 무쳐 온 ‘계란’들은 마침내 바위에 균열을 내었다.

노무현이 “참 일면적이고 편협하고 한심스럽다”고 비난한 민주노동당은 이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김용철 변호사는 “민노당 의원들이 당선될 때… 이견희 회장이 불안해하고 우려를 금치 못했다”고 증언한다.

사제단은 “삼성의 불의와 관련되지 않은 공기관과 인사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현실”에서 “대수술의 칼을 과연 누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한탄한 바 있다.

이견희와 공범들의 범죄에 고통받으면서도 끝없이 저항해 온 노동자·민중이 정의를 위한 ‘대수술의 칼’을 잡아야 할 때다.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무찌를 것인가

무산될 듯한 특검 법안의 특검 추천권자인 대법원장 이용훈은 삼성 에버랜드 변호를 맡았던 당사자이며 특검 임명권자인 노무현은 공인된 ‘삼성 장학생’이다.

그래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양심적인 노동계, 학계,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특검을 추천하고 충분한 수사 기간도 보장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1998년 옷로비 특검,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특검, 2003년 대북송금 특검 등이 보여 줬듯이 특검 자체가 진실 규명을 자동으로 보장하진 않는다. 특검도 기성 권력층이 가하는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떡값’에서 자유로운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관건은 독립적인 대중 행동을 건설하는 것이다. 노회찬 의원은 이미 X

파일 사건 때 “1995년 전두환·노태우 구속 투쟁에 버금가는 대중적인 투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사제단과 참여연대, 진보연대 등이 주축이 돼서 ‘삼성 이견희 일가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승계 불법행위 진상규명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을 구성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제 반(反)삼성 투쟁의 힘들이 ‘국민운동’으로 결집돼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운동’은 김성환 위원장과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맞서 온 노동자들, 고려대 출교생들, 전 〈시사저널〉 노동자 등 언론인들, 삼성의 공공의료 파괴에 맞서 온 보건의료 단체들, 삼성의 환경 파괴에 맞서 온 환경단체들, 일관되게 삼성과 싸워 온 민주노동당과 급진좌파 등을 포괄한 개방적 공동전선이 돼야 한다. 다양한 세력들이 민주적 논의를 통해 투쟁

방향을 정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이 점에서 ‘국민운동’의 초동 주체 세력들이 폐쇄적 태도를 보이며 주요한 논의와 결정에 다른 세력들(특히 민주노동당과 급진좌파)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아마 그들 자신이 시민·



사회운동을 대표하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도 있는 듯하다.

2005년 X파일 사건 때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활동에서 교훈을 배워야 한다. 당시 공대위를 주도한 NGO들은 반(反)삼성 투쟁에 큰 기여를 했지만 몇 가지 약점도 있었다. 대중 행동 건설보다는 입법 청원 등에 치중했고 ‘정당 배제와 정치적 중립’이라는 잘못된 방침 때문에 힘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런 방침은 기성 정당의 입김이 들어올 틈만 주었다.

당시에 일부 좌파는 ‘미국의 음모’라거나 ‘지배자들 간의 쟁투일 뿐’이라는 잘못된 이유로, 노동조합 운동은 비정치적 경제주의 때문에 운동 개입을 기피했다. 이것은 NGO들이 계속 운동을 주도하도록 해 줬다.

이제 다시 투쟁의 기회가 찾아왔다. 지난번과 같은 오류를 피하며 강력한 투쟁을 건설한다면 이견희와 ‘공공의 적’들을 처단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노동자들이 우파 대통령에 맞서다

프랑스 노동자와 학생 들이 오만한 우파 정부와 '맞장' 뜨고 있다. 대학생들이 대학사유화 계획을 포함한 대학자치법 폐기를 요구하며 대학을 점거했다. 점거는 현재 85개 대학으로 확산됐다. 공공교통(국영철도·지하철·버스)과 전력·가스 노동자들은 11월 13일부터 특별연금 개악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11월 14일 시위에는 공공교통과 전력·가스뿐 아니라 교사, 학생, 간호사, 변호사, 어부, 오페라 배우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했다.

파업 투쟁의 파급 효과가 가장 큰 공공교통 노동자들의 첫날 파업 참가율은 약 62퍼센트였다. 이것은 1995년 총파업 당시 국영철도 파업 참가율과 같은 수준이다. 사르코지는 끄떡 없다고 허풍쳤지만 프랑스 전경련(MEDEF) 회장은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전력·가스 노조 지도부가 파업을 접고, 민주노총(CFDT)이 협상 전 파업 철회를 선언하자, 일부 언론은 노동총연맹(CGT)도 정부와 타협하면서 파업을 끝낼 거라 예상했다.

그러나 공공교통 노동자들은 파업 연장을 결의했다. 19일(월요일)에도 일부 지하철 노선 기관사들의 파업 참가율은 80~90퍼센트에 이르렀고, TGV 운행률

도 50퍼센트 미만이었다.

총연맹 지도부가 동요하지만 노동자들은 위력적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한 노동자는 “파업 연장이나 철회냐를 결정하는 것은 총연맹의 소수 지도자가 아니라 전체 회의다” 하고 말했다. 프랑스 최대 총연맹인 CGT 지도부는 감히 파업 철회를 주장할 수 없었다.

11월 20일 공무원 노동자 파업과 대규모 학생 시위가 다가오자 공공교통 노동자들의 자신감도 높아졌다. 인원 감축 철회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공무원 노동

자 투쟁은 규모가 매우 클 것이다. 또, 대학생 전국투쟁위원회는 20일과 27일 대학자치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호소했고, 공공교통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냈다.

공공교통 노동자들은 크게 고무 받았고, 19일 국영철도 노동자 전체 회의에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 파업 연장을 결의했다.

일부 총연맹 지도자들은 운동들을 연결하는 것을 “[운동의] 정치화”라며 반대한다. 그러나 운동을 정치화(일반화)할

때 이길 수 있다. 사르코지 개악 정책의 첫 단추인 특별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투쟁이 승리할 때, 다른 투쟁들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다.

특별연금 개악 반대 투쟁과 다른 투쟁들이 겹치는 이번주는 매우 중요하다. 활동가들이 얼마나 많은 노동자와 학생 들을 동원하고 다양한 쟁점들을 서로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느냐에 따라 사르코지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악에 맞선 투쟁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김용욱

소말리아와 ‘테러와의 전쟁’

켄 올랜드

미국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새로운 지역, 즉 아프리카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에 우호적인 군사기지들의 연결망과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관할할 지휘 체계를 구축하려는 계획이 한창 진행중이다.

많은 아프리카인들은 미군기지가 그렇게 확대되면 기존의 내전들이 더 격화하고 인종 갈등이 심화하는 한편, 아프리카의 석유와 천연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된 서방 다국적기업들의 지배력이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에티오피아의 소말리아 침략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그것은 미국의 대리전이고, 그 전쟁에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거나 난민이 됐다. 실제 희생자는 널리 알려진 다르푸르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 침략은 이슬람법정연맹 정부 — 15년 만에 처음으로 소말리아를 안정시킬 수 있을 듯했던 — 를 공격한 것이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이슬람법정연맹이 미국의 통제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알카에다와 이슬람법정연맹의 연계설을 들먹이며 이른바 “이슬람주의의 위협” 운운했지만, 사실 이슬람법정연맹은 알카에다에 동조하지 않는다.

미국 제국주의의 야심은 올해 2월 대통령 부시가 새로 아프리카를 관할할 미군 통합 사령부, 즉 아프리카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분명히 드러났다.

현재 아프리카의 주요 미군기지는 에티오피아와 국경을 맞댄 지부티에 있고, 약 1천8백 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은 아프리카 전역에 다양한 공군기지와 해군기지도 보유하고 있고, 이른바 “수련 잎” 기지들[연못 위에 떠 있는 수련 잎처럼 발판 구실을 하는 기지]도 몇 군데 더 구축해 놓았다. 현지 군대가 유지·관리하는 그런 시설들은 미국의 군사 공격 범위를 확장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현재 가봉·케냐·말리·모로코·상투메프린시페·세네갈·튀니지·우간다·잠비아에 그런 시설들이 있다.

지난 7월 상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군은 아프리카사령부 프로젝트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1998년 동부 아프리카의 미국 대사관들에 대한 폭탄 공격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테러리즘이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줬다.”

그리고 그 뒤의 중요한 문단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최근 아프리카는 중동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원유 수입처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기니만 방어 구상

부시는 2006년 계획을 발표하며 “미국이 중동에서 수입하는 석유의 75퍼센트 이상을 2025년까지 다른 곳의 석유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염두에 둔 유력한 대안이 바로 아프리카였다.

경제력과 제국의 힘은 항상 결합돼 있다. 2005년 미국은 아프리카 서부 연안의 10개국과 함께 해상 안보망을 구축하기 위해 ‘기니만 방어 구상’(Gulf of Guinea Guard Initiative)을 출범시켰다. ‘기니만 방어 구상’의 작전 지역은 아프리카의 주요 석유 매장지와 정확히 일치한다.

몇 달 뒤 미군 특수부대 약 7백 명이 알제리·차드·말리·모리타니·모로코·니제르·나이지리아·세네갈·튀니지의 군대와 함께 3주 동안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이런 군사 작전들은 아프리카 경제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기구들의 경제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과 함께 진행된다. 서방은 행들과 다국적기업들의 지배력은 안 그래도 비참한 대다수 아프리카인들의 경제 상황 악화에 일조했다.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이해관계가 되살아난 이유가 석유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이 아프리카에서 무력을 과시하는 데는 알카에다 —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 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

중국은 지금 미국에 이어 아프리카의 두번째 교역 상대국이다. 아프리카와 중국의 무역액은 지난해 5백55억 달러에서 올해 7백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추세는 당분간 수그러들 조짐이

없다.

프랑스, 영국 등 다른 제국주의 열강들도 [아프리카에서] 저마다 영향력을 강화하려 애쓰고 있다.

남아공이나 나이지리아 같은 아프리카의 아류 제국주의 국가들도 나름대로 영향력을 과시하려 애쓰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아프리카사령부의 노골적인 미국 패권 과시에 적대적인 또 다른 이유이다. 지극히 불균등한, 그러나 아프리카 일부 나라들의 엄청난 경제 성장은 또 다른 효과를 낳고 있다. 거대 도시들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20년 뒤에는 인구 1백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미국보다 기니만 지역에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극단적 빈곤 속에 살아가는 이들 도시의 대증은 저항의 온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방 열강들의 제국주의 군대와 경제적 투자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무장하지 않은 투자를 받아들일 것인가(그러나 중국은 아프리카에 막대한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그도 아니면 서방이나 중국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연합에 의존할 것인가 이 셋 중에서만 선택할 필요는 없다.

아프리카 전역의 도시들에서 벌어지는 저항 운동은 제3의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이집트·나이지리아·기니·남아공에서 이미 노동자들과 빈민들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운동들은 라틴아메리카의 운동 수준만큼 높아져야 한다.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에 모두 반대하는 대중 투쟁이 여러 나라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 축약하지 않은 전문을 <맞불> 웹사이트에서 꼭 보시오.

이명박 ‘시한폭탄’은 마침내 폭발하는가

이건희에 버금가는 ‘비리 재판기’ 이명박 앞에 이번엔 BBK 김경준이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며 나타났다.

개미투자자 5천여 명에게 6백억 원 피해를 입힌 BBK 게이트는 무기징역도 가능한 중범죄다. 검찰 수사에 따라 이명박은 후보 자격 박탈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우익들이 두려워한 후보 ‘유고’ 사태인 것이다.

무엇보다 BBK는 위장 전입, 탈세, 비리와 특혜, 자녀 위장 취업, 온갖 저질 발언 등이 쌓이면서 계속 커져 온 이명박에 대한 환멸과 분노를 마침내 폭발시키는 ‘한 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김경준은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입국했고, 이 국제사기꾼의 한마디에 나라가 들썩거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은 김경준이라는 뇌관의 점화를 막기 위해 “죽을 각오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두 차례나 송환 연기 신청을 했고 LA부터 검찰청사까지 김경준이 가는 곳곳에 ‘탐지조’를 급파해 24시간 추적을 벌여 왔다. BBK 의혹을 집중 폭로한 <한겨레>에는 60억 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수십만 명의 군중이 동원되는 전국적 민란”을 들먹이더니 “후보로 등록하면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게 선거법 11조의 취지”라며 검찰을 협박하고 있다.

검찰은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아들의 병역 비리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것

처럼, 이번에도 한나라당의 압력에 굴복할 듯하다. 검찰은 이명박에게 불리한 내용이 새 나갈까 봐 수사 취재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지난 8월에도 검찰은 도곡동 땅이 “제3자 소유로 보인다”는 어정쩡한 결론만 내고 수사를 끝냈다.

‘이명박 짜라시’라는 보수언론도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BBK 관련 토론 금지’까지 거론했다. 선

야릇한 웃음을 짓는 김경준과 똥줄이 타는 이명박

관위도 이명박을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마구잡이로 삭제하고 게시물 작성자는 물론 퍼나른 사람들에게까지 경찰 출석요구서를 보내 입에 자물쇠를 채우려 한다.

그러나 이런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의 위기는 심화하고 있다. <한겨레> 여론조사를 보면 이명박 지지율은 지난 한 달간 17퍼센트나 추락했다. 한나라당 일부 중앙위원과 당원들은 탈당하며

이회창 지지를 선언했다. 그래서 <조선일보> 김대중은 “BBK가 대포는 못 돼도 수류탄 정도의 위력이라도 발휘한다면 대선의 상황은 좌파에 유리하게 굴러갈 것”이라고 불안해 한다.

물론 이명박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다. 자신이 아무리 오물을 튀기며 악취를 풍겨도 ‘산토끼’들이 다시 범여권으로 돌아갈 리는 없다는 확신이다. 실제로 개혁사기 전과를 세탁할 간판 교체에만 골몰하는 정동영의 지지율은 담보 상대고 ‘후보 단일화’도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

‘개혁’을 말하다가 반개혁적 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하고, 파병 재연장 반대 입장을 밝혀 놓고 철군결의안 상정에는 반대하고, 삼성 특검을 합의해 놓고 청와대의 한마디에 돌아서는 모습은 정동영이 노무현의 계승자라는 확신만 심어 줬다. 정동영이 독재자 박정희를 “성공한 경제지도자”로 치켜세우는 데에 이르면 왔던 표도 이명박에게 돌아갈 판이다.

반면 ‘무응답증’은 일주일 새 두 배로 늘어 20퍼센트나 된다. <중앙일보>의 주간 여론조사에서는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아직 지지 후보를 못 정했다는 결과가 4주째 반복되고 있다.

우파의 위기와 범여권의 지리멸렬 속에 대선 판도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진보적 주장과 실천을 통해 약진할 수 있는 발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남성주

입시지옥, 사교육비 증대에 맞선

권영길 교육공약이 정답이다

하재근(학벌없는사회 사무처장)

이명박 후보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고등학교를 ‘다양화, 정상화’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망상이다. 한국인이 가고 싶어 하는 고등학교는 입시명문고이지 다양하거나 정상적인 고등학교가 아니다. 고등학교 다양화는 반드시 입시명문고의 등장, 즉 고등학교 서열화로 귀결된다. 명문대에서 노동자의 자식이 배제되는 것처럼 명문고에서도 노동자의 자식은 배제된다.

이 정책이 특히 악랄한 것은 여차피 자기 자식이 배제당할 걸 알면서도 노동자로 하여금 사교육비를 쓰게 한다는 데 있다. 노동자·농어민·지방민·강북민이 자식을 일류대에 보낼 수 없다는 걸 남도 알고 당사자도 안다. 그러나 혹시 기적이 일어날까 싶어 모든 소득을 사교육비로 쏟아 넣는다.

명문고를 만들면 혹시나 자기 자식이 명문고에 들어가서 장차 명문대에 좀더 쉽게 들어갈 수 있을까 싶어 더 일찍부터 더 많이 사교육비를 쓰게 된다. 다행히 자식을 명문고에 들여보낸 집안은 지금까지 들인 공이 아까워서라도 사교육비를 더 쓰게 되고, 못 보낸 집안에선 불이익을 보충하려고 사교육비를 더 쓰게 된다.

이명박 후보의 정책은 ‘공교육을 정상화·내실화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공

교육을 다양화해서 창조성을 기른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던 말 아닌가? 바로 참여정부에게서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국민의 정부, 더 나아가 문민정부에게서도 들었던 말이다. 이명박 후보의 공약은 사실 전혀 새롭지 않은 재탕 삼탕 정책이다.

재탕 삼탕

공교육 정상화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한다는 말이 언뜻 들으면 매우 좋은 말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사기’다. 공교육은 사교육을 흡수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사교육은 실제로는 입시 사교육을

일컫는 말인데, 공교육이 입시교육을 해선 안 된다.

또 그렇게 하려고 해도 공교육은 영원히 사교육을 흡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교육은 남보다 앞서려고 돈을 주고 맞춤교육을 받는 것인데, 공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어서 영원히 사교육을 따라잡을 수 없다.

중고등학교 공교육 제도를 바꿔 사교육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환상에 기초를 두고 만든 것이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같은 것들이다. 이 학교들이 너무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자 참여정부는 ‘개방형 자율학교’로 바뀌서 여전히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만이 ‘대학서열체제 혁파’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학교들이 생겨나면 그 다양성에 자기 자식을 맞춰 줄 수 있는 건 결국 부자들뿐이다. 자립형 사립고든 특목고든 중상층 자녀들만 가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공교육 정상화라는 좋은 말이 왜 한국 사회에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일까? 바로 대학서열체제라는 기괴한 제도 때문이다. 이 대학서열체제에서 모든 교육은 입시교육으로 수렴되므로 그 어떤 교육개혁을 해도 사교육비만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노동자·농어민·민중은 공교육 정상화라는 주술에 홀릴 것이 아니라 대학서열체제 혁파를 요구해야 한다.

지금 대선 후보 중에서 대학서열체제를 끝장내겠다고 나선 이는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가 유일하다. 오직 권영길 후보만이 참여정부와 그 전 정권들에서 이어진 교육정책을 거부하고 있으며, 오직 권영길 후보만이 전 국민을 사교육 지옥 폐쇄를 결의할 정책을 공약하고 있다.

사교육 공화국에서 사교육을 없앤다는 것은 일종의 혁명이다. 이것을 일개 대선주자가 혼자 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은 민중 자신의 힘으로 쟁취해야만 한다. 11월 24일에 ‘공교육 정상화 사기’를 고발하고 건국 이래 최초로 대학평준화를 요구하는 행사가 열린다. 이날 나라 안의 온 민중이 참가해 사교육 지옥 폐쇄를 결의해야 한다.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범국민대회

11월 24일(토) 오후 5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주최: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준)

“**코리아** 연방공화국”이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내세울 국가 비전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이 비전은 당을 결속시키기보다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애초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당내 예비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권영길 후보가 내세운 구호였다.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권영길 후보는 “코리아연방공화국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당 내에서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얻지 못했고, 당 밖에서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10월 29일 민주노동당 선대위 회의에서 “코리아연방공화국”이 표어(“메인 슬로건”)로 채택되지 못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였을 것이다. 게다가 권영길 후보도 “현재의 정세와 대선 국면에 [코리아연방공화국]이 적절치 않으며 당 내에 논란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선대위에 전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당의 일부 지도자들은 메인 슬로건으로 채택되지 못한 “코리아연방공화국”을 이번에는 “국가 비전”으로 다시 들고 나왔고 결국 11월 12일 선대위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확정됐다.

물론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당내 경선으로 당선한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었고, 선대위에서 표결을 통해 정해졌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당내 의견그룹들의 이견을 고려하고 특히 당 밖의 진보단체와 인사 들까지 폭넓게 대변하고 결속하고자 한다면 아무리 다수일지라도 특정 안을 고집스럽게 관철시키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표결에서 승리한다 해도 그것은 단결을 저해하는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이한 정파(의견그룹)들로 이뤄진 민주노동당은 공동전선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

더구나 당내 토론도 섣덕 과정도 거의 없었다.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었지만, 그 투표가 “코리아연방공화국”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도 아니었고 당원들은 후보의 경력 등을 더 중요하게 봤을 수도 있다. 또, 논란이 되는 쟁점들은 대선을 앞둔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 모두에서 토론 주제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권영길 후보가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 당내 일부 의견그룹들(의 구성원들)은 대선에 열의를 보이지 않는 잘못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런데 판료적으로 밀어붙여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통일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전하겠다는 자민통 경향 지도자들의 종파적 행태는 안타깝게도 또 다른 종파적 태도에 발미를 제공하고 격화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계급투쟁

“코리아연방공화국” 비전이 제시하는 “10대 시정방침”은 대부분 훌륭한 내용들이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1가구 1주택 등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제시해 온 대표적 정책들을 망라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을 실현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고 규정한 데 있다. 여기에는 통일이 돼야 무상의료, 무상교육, 1가구 1주택 등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강력한 전제가 깔려 있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을 주창해 온 이용대 정책위의장은 “통일국가가 되지 않고는 민



코리아연방공화국 논쟁에 부쳐

김하영

중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 “분단구조를 타파하는 통일국가 건설이 아니고서는 기독교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올해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코리아연방’ 건설을 통해 분단된 한국사회를 ‘민중이 잘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진보정치〉 343호)

과연 그저 통일만 되면 “민중이 잘사는 나라”가 될까? 통일을 통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노동대중의 정서와 괴리된 한 무리 사람들의 믿음인 듯하다. 엄청난 빈부격차의 남한이 가난에 시달리는 북한과 통일에 시너지 효과를 얻으리라는 대중적 기대는 거의 없다.

물론 강령이 대중 정서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므로, 분석이 옳다면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분단에서 찾는 분석은 억지로 꿰어 맞추기이다. “재벌과 외국투기자본의 배를 불리는 경제구조[는] 분단구조의 산물”이 아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대기업과 외국 투기자본이 배를 불리는 나라가 분단 한국만이 아닌 것만 봐도 그렇다.

물론 분단으로 남북 민중은 단일 국가를 건설할 기회를 빼앗겼고 전쟁을 비롯한 여러 수모와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그 뒤 남한과 북한은 각각 미국과 소련의 영향권에 편입돼 그 국가들의 모습을 좇아 건설됐다. 지난 60년 동안 남북은 자체의 국민국가를 건설하고, 급속한 공업화를 이룬 것이다. 그 결

과 두 개의 코리아 안에 각각 선명한 계급 분단이 생겼고, 계급투쟁이 중요해졌다. 그동안 남한 사회를 이끈 변화의 동력은 바로 계급투쟁이었다. 박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역사 일반에 대해 말했던 것처럼 말이다. “코리아연방공화국” 비전이 제시하는 “10대 시정방침”의 성취도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같은 민족인 지배계급에게 양보를 강제함으로써 말이다. 분단을 해소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자동으로 성취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분단 해소를 위해 계급을 초월한 단결이 강요되면 노동자·민중의 이익은 침해될 수 있다.

사실, 낮은 단계든 높은 단계든 “상호 체제 인정”을 전제로 하는 연방제는 남북의 사회 변혁과 아무 관계가 없는 개념이다. “주어진 현실에 진실로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그러저저 분단이 만조스럽고 통일

의 필요성조차 아득”하며 노동자·민중이 아말로 통일이 필요하다는, 통일/반통일 세력 식의 얘기는 현실과 괴리된 교조적 주장일 뿐이다. 소위 반통일 세력이어야 마땅한 남한의 정권과 자본이 1990년대 이후 내내 남북관계를 주도하지 않았는가. 통일되기 전이든 후이든 근본적 사회변혁의 과제는 통일과는 별개이며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물론 군사력 등 강제에 의한 것(병합)이 아닌 한은 통일은 지지해야 마땅하다. 모든 통일이 다 변혁적이라고 “빨간칠”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변혁적이지 않은 통일은 지지하지 않겠다는 조건부적 태도도 잘못이다. 민족문제이니만큼 국민의 다수가 통일을 원한다면 비록 이상적인 방안대로의 통일이 아니라도 그것을 지지하고 그 과정에서 남북 노동계급 대중의 단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의 한 학교 복도에 붙어 있는 성적등수표 -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교육이 아니다

북한 문제

통일 문제는 통일 상대인 북한 문제를 제기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는 통일국가 비전은 북한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이용대 정책위의장은 “연방통일국가를 건설하자면 북쪽 사회비전은 북쪽 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상대방 체제의 존중과 불간섭”이라는 신성동맹 속에서는 어떤 변화도 가능하지 않다. 만약 한반도 전체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북한 대중의 열망은 물론 남한 대중의 열망도 불려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남한은 “10대 시정”을 하는 반면 북한은 계속 가난하고 억압적인 사회로 남는다면 통일은 매력을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무상교육·무상의료를 내세우며 북한은 경제만 살아나면 변할 게 없다는 암묵적 가정을 하곤 한다. 하지만 북한의 학교 복도에 나붙은 성적 등수표를 보면 입시 경쟁에 쫓는 남한의 학생들은 동병상련을 느낄 것이다. 심지어 대학도 성적표를 복도에 공개한다. 김일성종합대학의 입학 경쟁률은 30대 1이고, 대학 본고사를 치를 때는 북한의 엄마들도 교문에 엮을 뿐이다. 경제난다면 비록 이상적인 방안대로의 통일이 아니라도 그것을 지지하고 그 과정에서 남북 노동계급 대중의 단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통일 국가 비전은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노조를 결성할 권리와 이를 통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할 권리, 조선로동당과 다른 의견을 표현할 권리, 그리고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등 기본적 권리를 모두 일관되게 옹호해야 한다.

장애인 차별 철폐와 이주자·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 권리 보장 같은 “10대 시정” 내용도 북한에 적용돼야 한다. 북한은 전후에 장애인을 평양에서 쫓아낸 바 있고,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다. 얼마 전에

는 ‘다인종, 다민족문화’론에 대해 “민족의 단일성을 부정”하고 “남조선을 집창화하려는 민족말살론”이라고 비난했는데, 이런 관점으로 이주자를 환영하고 권리를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진정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비전을 북한 노동자·민중에게 제시하는 ‘진보 개입’은 제국주의의 대북 압박과 개입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강화해야 할 아래로부터의 계급 연대이다.

민생이나 통일이나?

당내 의견그룹 ‘전진’과 일부 개인들은 “민생”이 대선의 최대 쟁점이기 때문에 “코리아연방공화국”이 국가비전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을 그토록 협소하게 정의해서는 안 된다. 빈곤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전쟁과 군국주의라는 제국주의의 군사적 측면과 한 쌍이다. 국가보안법 등의 억압 장치들도 결국 착취 강화를 위한 수단이다. 민생을 이런 문제들과 대립시킨다면 협소한 의미의 민생조차 지킬 수 없다.

또, “코리아연방공화국”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해서 선거운동 못 한다는 결론(조승수 진보정치연구소장)으로 이어지는 것도 옳지 않다. 일각에서는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는 표어가 지지를 하락을 가져올까 봐 우려하지만 그것이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을 것 같다. 어떤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느냐, 후보가 누구냐보다 민주노동당의 예상 득표치 안팎의 근소한 표차로 승부가 가려질 것 같은 객관적 선거 구도가 가하는 압박이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주관적 요인을 지나치게 크게 보는 사람들은 후보가 문제다, 공약이 문제다, 비전이 문제다, 선거운동 방식이 문제다 하며 참을성 없이 속좌익을 찾는 데,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들을 둘러싼 분열 양상이 당 지지 결속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진보 연원 세력을 결집시키는 커넥트 내부 단결도 돼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사람들은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분당 얘기마저 꺼내고 있다.

비판을 규율 조처로 억누르려는 것(얼마 전 조승수 소장이 쓴 표현 — “군사왕조 집단인 북한” — 에 경고줄 줄 것을 주문하는 안건이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에 올랐다)도 잘못이지만, 비판과 지지가 결합될 수 없다고 보는 것도 잘못이다. 비판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민주노동당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코리아연방공화국”이 잘못된 관점을 담은 표어이지만, 다른 정당 후보들의 정책에 비해 월등히 나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앞서 지적했듯이, “10대 시정방침”에는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제기해 온 대체로 훌륭한 정책들이 담겨 있다.

다만 이런 정책을 실현하는 힘은 통일이 아니라 계급투쟁에서 나온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강조하고 싶다. 민주노동당은 통일이 “나라다운 나라”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처럼 말하기보다 반전·반신자유주의 진보 운동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더욱 힘 쏟아야 한다.

비정규직의 목소리가 되려는 민주노동당

11월 17일 열린 민주노동당 제6차 중앙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한 결음을 한 발 더 내딛었다. 내년 총선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명부 2번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출마시키기로 결정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몇 년간 치열하게 투쟁하며 노동운동을 이끌어 왔다. 특히 올해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호하고 용기있는 투쟁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위선을 폭로하며, 비정규직 차별 철폐 여론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비정규직 투쟁의 지도적 투사가 의회 연단을 활용해 투쟁을 고무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운동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권영길 후보는 지난 11월 1일 “내년 총선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국회에 보내야 한다”고 호소했고 중앙위원들이 여기에 만장일치로 호응했다.

뿐만 아니라, 당 밖의 비정규직 투사들에게



도 개방하기 위해 후보등록일 전까지 당에 가입하기만 하면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아도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특별 조항도 마련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당이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김재현

사회당은 민주노동당의 오른쪽으로 가려는가?

지난 11월 5일 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는 민주노동당, 새진보연대 등과 함께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를 논의해 온 진보정치연석회의 합의안을 부결시키고 안타깝게도 독자 출마를 결정했다. 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는 후보단일화 방식이 경선이 아니라 ‘정치협상’으로 합의된 것을 부결 이유로 밝혔으나, 협상 전부터 민주노동당이 경선을 받기 어렵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진정한 이유가 아닐 것이다.

사회당 지도부는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정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과 연합하는 것이 득 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리고 이런 판단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사회당의 종파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사회당 급진 후보는 “몰락해 가는 구래의 진보정치[민주노동당]와 한국사회당과의 준별점을 세워야 한다”며 민주노동당과 선을 긋는 데 치중하고 있다. 게다가 ‘사회당이 민주노동당의 왼쪽에 있다’는 통념과 달리 오른쪽에서 민주노동당을 비판하고 있다.

예컨대, 최광은 사회당 대변인은 “문국현 후보의 ‘사람중심 진짜 경제’가 실현됐으면 하고, 그것이 [권영길 후보의 ‘코리아연방공화국’ 보다] 더 진보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기업·노동자 3자연대를 통해 노동사회혁신기금 1백조 원을 조성해 직업교육에 투자”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게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라고 주장하거나, FTA의 본질이 신자유주의라는 점을 의뢰한 채 ‘한미FTA와 같은 개방 정책에 대책 없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는 태도는 문국현과 대동소이하다.

“진보나 보수냐 하는 낡은 이분법”을 벗어난 “대안적 발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첨단기술 중심 수출제조업

국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보면 어안이 병병할 정도다.(‘범국민행동의날’에 배포한 사회당 선전물)

가장 눈에 거슬리는 비판은 ‘범국민행동의날’처럼 대중 투쟁을 고무하는 방식이 “낡은 민주노총과 같은 집토끼를 지키는 데 유효한 방식”이라고 폄하하는 것인데, 지배자들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에 퍼붓는 악선동을 따라하는 고약한 주장이다.

준별점

사회당 지도부는 특히 민주노동당의 “코리아연방공화국” 공약과 좌파 민족주의 경향의 지도부를 비판한다. 급진 후보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민족주의 운동은 전혀 진보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당이 민족주의를 비판하며 더 급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즉 민족주의적 반제국주의의 불철저함을 비판하면서 일관된 국제주의적 반제국주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사회당은 노무현이 종전선언을 위한 ‘4차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임기 이후라도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사회당이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무비판적으로 추종했다. 제국주의에 대한 타협적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사회당의 우경화는 결국 대선에서 범여권과 연대할 수 있다는 경약할 만한 입장으로 나아갔다. 정동영, 문국현의 공약이 사회당의 공약과 “사람”을 공통분모로 맞닿아 있다”며, “진보개혁세력의 대연정”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임세환 사회당 공보특별·부대변인)

사회당과 급진 후보가 이처럼 오른쪽에서 민주노동당을 비판하면서 기성 정당과 차별성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진보진영의 폭을 넓히는 데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강동훈



정성진의 맑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그람시와 21세기 혁명

2007년은 러시아 혁명 90주년인 해이자 이탈리아 혁명가 그람시(1891-1937) 사망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 가는 오늘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기억하는 어떤 특별한 학술행사가 열렸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 옛 소련과 동유럽 블록 붕괴 이후 우리나라 진보진영의 대거 '전향' 사태를 고려하면, 러시아 혁명 90주년이 이렇다할 축하 행사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그람시 사망 70주년까지 그냥 넘어가는 것은 뜻밖이다. 그 많던 그람시 연구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한나라당 의원 박형준의 행적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 자칭 그람시주의자들은 그들을 한동안 이단으로 몰았던 스탈린주의자들과 함께 지난 세기말 이후 포스트맑스주의를 거쳐 노골적인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로 변신했다. 그람시는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진보진영에서 '전향'의 필수적 징검다리이거나 각종 포스트주의적 왜곡과 학술주의적 소비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고전 맑스주의의 창조적 확장으로서 그람시 사상의 정수는 외면되거나 거의 인식되지 못했다.

게다가 21세기 들어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외 대안부재론이 석권하자 아무래도 미심쩍은 그람시는 아예 용도 폐기돼 버렸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람시를 기리는 일조차도 '다함께'와 같은 급진좌파 진영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맞붙) 41호(2007.4.28 참조).

헤게모니와 진지전

반면, 해외에서 그람시 연구는 지난 세기말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헤게모니/대항헤게모니', '시민사회', '기동전/진지전', '수동 혁명', '역사적 블록', '유기적 지식인' 등 그람시가 옥중에서 보석처럼 다듬은 개념들은 이미 전후부터 맑스주의 정치학, 철학, 문화, 역사학 분야의 주요 연구 대상이었다. 이 개념들은 지난 세기말 이후에는 신(新)그람시 학파(Neo-Gramscian) 국제정치경제학(IPE), 국제관계론(IR), 지리학, 언어학, 교육학 등 인문사회과학의 거의 전 영역에 걸쳐 주요 패러다임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은 신그람시 학파 국제정치경제학에서 보듯이 세계화 시대 국제적 국가관계,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성립과 해체를 분석하는 유용한 분석 도구로 적용되고 있다. '수동 혁명', '헤게모니', '역사적 블록'과 같은 그람시의 개념들은 현대 한국 자본주의의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도 적용되고 있다. 지난 세기말 이후 우리나라 진보 학계에서 그람시가 맑스주의 일반과 함께 거의 소멸됐다면, 해외 진보 학계의 그람시 연구는

최대의 호황 업종이 돼 있다.

21세기 들어 그람시의 사상은 해외 진보 학계에서뿐 아니라 진보 운동에서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지난 1970~80년대에 각종 포스트주의, 개량주의, 시민운동의 태두로 왜곡되어 숭상됐던 그람시는 21세기 들어서는 반전·반자본주의 운동의 주요 이념의 하나로 재인식되고 있다.

그람시의 사상은 1999년 '시에를 전투' 이후 전 지구적 규모에서 고조되고 있는 대안세계화 운동에서 이른바 '초국적 시민사회'에서의 '대항헤게모니'(counter-hegemony) 이념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제3~4차 코민테른(1921~22년) 시기 레닌과 트로츠키의 공동전선 사상의 계승·발전으로서 그람시의 헤게모니와 진지전 개념은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의 반전·반자본주의 공동전선 구축에 유용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혁명은 왜 실패했는가?', '자본주의는 왜 쉽사리 붕괴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그람시의 "암석에서 파를 뽑아내는" 것과 같은 극한적 사고는 '자본주의 외 대안부재'론이 득세하고 있는 오늘날 혁명적 전략의 구상과 실천에 귀중한 영감을 준다.

21세기 혁명을 기획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불을 이루고 있는 그람시 영역에 적극 개입해 그람시를 화두로 고전 맑스주의의 헤게모니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각종 포스트주의자들과 신그람시

학파의 전유물이 돼 온 그람시를 고전 맑스주의의 전통 속으로 재탈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람시가 상부구조와 '시민사회'의 이론가라는 포스트주의자들의 왜곡이 논박돼야 한다. 포스트주의적 그람시 왜곡의 선구자들인 라클라우(E. Laclau)와 무프(C. Mouffe)조차도 그람시가 너무나 경제주의적이며 본질주의적이라고 불평하지 않았던가? 포스트주의자들은 그람시에 빚대어 시민사회의 절대적 자율성을 옹호하지만, 그람시 자신은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라는 《옥중수고》의 유명한 정식화에서 보듯이, 자본주의에서 시민사회는 정치사회를 위협하기는커녕 자본주의 국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론적 자원

그람시가 고전 맑스주의 전통의 수호자라는 점을 강조한 나머지, 그람시가 《옥중수고》에서 국가와 이데올로기·문화 등의 영역에서 고전 맑스주의 이론을 새롭게 발전시킨 공헌이 과소평가돼서는 안 된다. 포스트주의자들이 《옥중수고》시기의 그람시를 절대화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옥중수고》이전 토리노 공장평의회 투쟁 및 당 건설 시기의 그람시를 특권화하는 것으로 치환돼서는 곤란하다. 《옥중수고》이전 시기 그람시의 사상이 단지 《옥중수고》의 전사(前史)

가 아닌 것처럼, 《옥중수고》는 《옥중수고》이전 시기에 대한 "방대한 후주(後註)"나 단순한 회고도 아니다.

물론 《옥중수고》의 중요한 공백에도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옥중수고》에는 맑스 경제학의 핵심 범주들인 상품물신성, 가치형태, 잉여가치 등의 범주가 누락돼 있다. 그람시는 유명한 옥중 후원자이자 신리카도 학파(Neo-Ricardian) 경제학의 정초자인 스라파(P. Sraffa)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리카도를 비롯한 고전경제학과 맑스 경제학 간의 단절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다.

또, 그람시는 경제주의에 대한 철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옥중수고》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포드주의와 아메리카주의라는 개념들에는 '제2인터내셔널 맑스주의'에 고질적인 단계론의 잔재가 남아 있다. 이 때문에 그람시의 포드주의와 아메리카주의 개념들은 뒤에 조절이론을 비롯한 각종 포스트주의적 혹은 스탈린주의적 단계론으로 쉽게 변형·동화될 수 있었다. 비록 그람시 자신은 이들 개념을 맑스의 이윤을 저하 경향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추상 수준에서 정식화했지만 말이다.

나아가 트로츠키와 연속혁명론에 대한 그람시의 비판과는 대조되는 스탈린주의 체제에 대한 침묵 역시 비록 옥중이라는 조건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고전 맑스주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돼야 한다.

이러한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그람시의 사상은 시장근본주의와 경제지상주의가 지배하는 가운데 자본주의 양극화의 모순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 현실을 분석하고 전복할 수 있는 강력한 이론적 자원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신자유주의 '수동 혁명' 세력에 원조 수구 세력까지 끼어들어 더욱 보수화하고 있는 대선 정국에서 진보진영의 '대항헤게모니'를 구축·확장하는 데서 그람시의 《옥중수고》의 개념들은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마르크스와 한국경제》, 《마르크스와 트로츠키》의 저자이고, 《반자본주의 선언》,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 등의 역자이다.

추천 소책자

《곡해되지 않은 그람시》

크리스 하먼 지음

1천 원

※ '다함께' 웹사이트
(www.altogether.or.kr)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낙태는 왜 합법화돼야 하는가?

이현주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경험한다. 세계에서 매년 2천6백만 건의 합법 낙태가 이뤄지고 2천만 건의 불법 낙태가 이뤄진다.

불법 낙태는 여성들에게 매우 위험하다. 낙태가 불법인 상황에서 많은 여성들은 안전한 낙태 시술소를 찾지 못한 채 사회적 비난과 처벌이 두려워 위험한 시술을 받곤 한다. 불법 낙태는 어둡고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때때로 마취도 없이 이뤄지곤 한다.

심지어 일부 여성들은 스스로 낙태를 시도하기도 한다. 최악의 경우 여성들은 꼬챙이나 뜨개질 바늘 같은 뾰족한 물건을 자궁 안으로 집어넣어 낙태를 하거나 유산을 유도하기 위해 납 같은 독성물질을 이용한다.

그 결과, 여성들은 흔히 감염·중독·출혈·불임을 감수해야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1967년 낙태가 합법화되기 전에 산부인과 병상의 최대 4분의 3을 불법 낙태 후유증 환자들이 차지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에서 불안정한 낙태로 사망하는 여성들이 매년 7만 8천여 명이고, 수백만 명이 부상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현실은 낙태권이 여성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한국의 법은 현실을 무시한 채 낙태를 불법화하고 있다. 1953년에 제정된 형법 269조는 낙태를 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명시하며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1973년에 제정된 ‘모자보건법’도 제14조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낙태가 불법이라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낙태율이 세계 최고라는 말까지 있다. 2005년 보건복지부가 고려대 산학협력팀에 의뢰해 실시한 전국실태 조사를 보면, 15~44살 한국 여성의 연간 낙태율은 1천 명당 평균 29.8명으로, 낙태가 합법인 미국(21.1명)이나 영국(17.8명)보다 많다.

물론 오늘날 한국 여성들이 옛날처럼 무허가 시술이나 자해 같은 방식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에서 낙태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낙태가 불법이다 보니 여



자궁에 못박힌 여성 - 여성이 스스로 출산을 결정할 수 없다면 삶도 온전히 통제할 수 없다

성들은 은밀하게 시술받고 사회적 비난과 죄책감에 시달린다.

또, 낙태 시술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여성들은 비싼 병원비를 감당해야 한다. 비싼 병원비는 특히 노동계급 여성과 청소년들에게 매우 큰 문제다. 이것은 낙태 합법화가 노동계급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 준다.

낙태는 살인?

낙태 반대 운동가들은 낙태가 살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사람들의 정서에 호소하기 위해 태아의 생명력을 과장한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은 태아가 자궁 안에서 움직이는 사진, 낙태 시술기가 자궁 안으로 들어왔을 때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동영상 등을 보여 주곤 한다.

하지만 호흡이 가능할 만큼 폐가 발달할 때까지는 어떠한 태아도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없다. 자궁 밖에서는 24~25주 된 태아의 80퍼센트가 사망하고, 27주 된 태아의 62퍼센트가 사망한다. 사는 경우에도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얼마든 간에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삶이 충돌한다면, 당연히 여성의 삶이 우선이어야 한다.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에 따른 희생을 모두 감내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여성이기 때문이다.

낙태 반대 운동가들의 과장과 달리, 낙태는 대부분 태아가 인간의 형체를 갖추기 전인 임신 16주 이전에 이뤄진다. 이 시술은 간호사도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다. 영국의 통계를 보면, 22주 이후에 하는 낙태는 전체 낙태의 1퍼센트도 채 되지 않는다. 웬만해서는 여성들이 후기 낙태를 선택하지 않는다. 후기 낙태가 더 큰 도덕적 죄책감을 수반하고 건강에도 더 안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낙태가 불법인 상황에서는 안전하고 신속하게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고, 낙태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임신 사실을 숨기고 망설이다가 뒤늦게 낙태를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후기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낙태는 합법화돼야 한다.

낙태 반대 운동가들은 종교적 이유로 낙태에 반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종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은 파리 코뮌의 여성 투사 루이즈 미셀이 법정에서 자신과 파리 코뮌의 대의를 방어하면서 한 말에서 따온 것이다.

교가 낙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가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근본주의자들이 유별나게 낙태권을 격렬하게 반대할 뿐, 다른 45개 교파에서는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한다.

프로테스탄트 근본주의자들과 가톨릭 교회는 낙태한 여성들이 “하나님의 생명 원칙에 순응”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성경에도 낙태 금지는 분명히 언급돼 있지 않다.

사실, 가톨릭 교회조차 항상 낙태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가톨릭 교회는 1869년 교황 비오 9세가 낙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바꾸고 나서야 비로소 초기 낙태를 금지했다. 조사 결과, 가톨릭 교회가 낙태를 완전히 금지한 뒤에도 가톨릭 신자들조차 다른 사람들과 거의 같은 비율로 낙태를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낙태 - 여성의 선택권

낙태권에 반대하는 지배자와 우익들이 생명 운운하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미국에서 낙태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자들(1백20만 명을 죽인 살인마 부시가 대표적)은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고 사형제도와 핵무기도 찬성한다. 이들은 심지어 낙태 시술 병원에 침입해 의사와 낙태 시술을 받는 여성을 살해하거나 병원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낙태권에 반대하는 지배자와 우익들은 종교와 도덕을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매우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수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하는데도 이들이 낙태를 반대하는 진정한 이유는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여성들이 양육과 가사를 책임지도록 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낮게 유지하려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뛰어들면서 아이를 낳을지 말지, 언제 낳을지를 선택할 권리가 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해졌다. 자신의 출산을 통제할 수 없다면 여성은 자신의 삶을 계획하거나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낙태권은 여성 해방에서 필수적인 권리이다.

여성의 출산과 몸은 국가나 교회, 남편, 부모 등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주간 <맞불>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www.counterfire.or.kr / reader@counterfire.or.kr / 전화 : 02-2271-2395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니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되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비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독자편지

letter@counterfire.or.kr

11월 25일(일)까지 독자편지를 보내 주십시오

비종파적인 눈으로, 낙관적으로

얼마 전 65호 기사들에 대한 몇몇 독자들의 반응을 접했다. 어떤 독자는 민주노동당이 반한나라당 전선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했다면서 삼성 특검법 발의를 위한 통합신당과의 공조를 그 근거로 들었다. 또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날에 대한 주류·반(半)주류 언론 들의 기사 비중이 삼성과 BBK 보도에 비해 현저히 부차적이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동당원들의 자신감이 훼손됐다는 주장도 있었다. 범국민행동의날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분명히 주장하는 독자도 있었다. 나는 자본가 정당들이나 민주노동당 자신이나 후보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반한나라당 전선 주장은 민주노동당 내 소수의 목소리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소수 주장일지라도 <맞붙>이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옳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자체가 특검법을 매개로 반한나라당 후보 단일화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다. 반한나라당 전선론을 비판한 김하영 동지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다. 또한, 범국민행동의날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정부가 그 행동을 그토록 두

려워 해 흑심하고 치사한 탄압 조치들을 남발했는데도 그만한 규모의 집회가 열린 것을 성공으로 보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성공으로 보겠는가. 그날 집회에 참가한 해의 사회주의자들도 한국의 운동이 잘 조직돼 있고 단단해 보였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일본인들이든 서양인들이든 모두 크게 고무돼 새벽까지 뒤풀이를 하며 자신감을 다졌다. 나는 노동계급의 대중 행동과 노동계급의 대중 정당에 대해 수백만 노동대중의 비종파적인 눈으로, 낙관적으로 볼 것을 촉구한다. 억지춘향식 낙관이 아니다. 낙관의 설득력 있는 근거는 이미 65호의 해당 기사와 그 밖의 다른 기사들에 나와 있으므로 생략하겠다. 그 대신 “보수 우파가 집권하더라도 그것이 곧 운동의 침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최근 사르코지에 맞선 프랑스 노동자 투쟁이 보여 주고 있다”는 김인식 동지의 지적을 공유했으면 한다. 근거 없는 비판론과 그로 말미암은 종파주의로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말이다.

최일봉

‘입시지옥’ 현장에서

김포외고 사건으로 드러난 입시 학원과 외고의 ‘동업’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학원에서 개최하는 ‘외고 입시 설명회’에 외고 관계자들(교장, 입학홍보부장 등)이 직접 강사로 참석하거나, 외고 교사들이 외고 입시용 문제집 제작에 참여해 왔다.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인 교사가 학교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맡고 있다는 점은 이 사건이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서는 것임을 나타낸다. 사실 학벌 위주의 입시 경쟁체제 하에서 이러한 비리는 예정된 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년부터 시작한다는 학원의 ‘외고준비반’에서 외고들의 서열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외고 입학생들의 수준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 외고 입학생들의 성적이 3년 뒤의 ‘명문’대학 진학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외고들은 자신의 서열을 높이기 위해 입학 홍보 담당 교사들을 학원에 보내 홍보를 한다. 수도권 외곽에 있거나 신설되는 외고의 경우 이런 홍보가 학교의 서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 유출과 같은 극단적인 커넥션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입 때문에 고등학교 학사 일정이 왜곡되는 현상이 일상화됐다

면, 이제 특목고 입학을 위해 중학교 학사 일정이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가르치는 중학생들도 대학 입시에 유리한 외고 진학을 준비하느라 고등학교 국영수 과정을 학원에서 새벽까지 공부하고 낮에는 학교에서 병든 닭처럼 졸고 있다. 이들이 성적 부담으로 자살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닌가! 교육 당국은 다음 정권으로 미룬 외고 폐지 계획을 즉각 추진하고, 대학 입시 폐지와 대학평준화 등 ‘입시 지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당장 도입해야 한다.

김성보(중학교 교사)

진실은 묻히지 않는다

1991년 4월 26일 명지대학교 1학년이었던 강경대 열사가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싸늘한 시체가 됐다. 당시 학생이던 나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며칠 뒤에는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었던 박창수 씨가 의문사를 당했고 시체마저 탈취됐다. 이런 폭압적 탄압에 항거하는 분신이 이어졌다. 모두 12명의 학생들과 청년들이 목숨을 던져 정부에 항의했다. 정부는 운동 세력을 비방하고 도덕성을 깎아내리려 혈안이 돼 있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건이 바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었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의 사회부장을 맡고 있던 김기설 씨가 분신하자 한 시간도 못 돼 당시 검찰국장 정구영은 분신에 조직적 배후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5월 투쟁을 잠재우는 수단으로 이 사건을 날조하고 조작했다. 검찰은 강경대 열사의 장례식 날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 발표했고, 강기훈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성균관대 학생 김귀정 열사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죽은 다음날이었다. 그 해 5월 27일자 <조선일보> 사회면의 가장 커다란 제목은 “강기훈 씨 자살방조 영장”이었고, 그 아래 “여대생 사망 새 불씨로”라는 아주 작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강기훈 씨는 정부기관인 국과수의 ‘대필’ 판정 하나로 무려 3년을 감옥에서 지내야 했고, 16년 동안 커다란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으로 이 사건을 지휘한 전 대법관 강신욱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을 10여년이 지나 문제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떠들고 있다. 강기훈 씨의 말처럼 현재 검찰 고위직이나 변호사로 뽐뽐하게 살고 있는, “당시 짜맞추기 수사를 했던 검사들의 과오도 모두 밝혀내야 한다”

김태현

고려대 출교생들에게 연대를

울초부터 <맞붙>을 통해 많은 소식과 기사를 접하고 있다. 64호 신문에서 고려대 당국이 법원의 출교무효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는 기사를 보고 대학 당국의 옹졸하고 비교육적인 처사에 분노가 치밀었다. 삼성같은 기업에 맞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재벌 눈치 보기에 급급한 고려대 당국은 역사의 엄중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힘든 과정 속에서도 양심이 살아 있음을 투쟁으로 확인하고 있는 고려대 출교생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부산 영도에서 hanbyul74

대학 맑스주의 포럼

건국대 · 한양대
러시아 혁명 90주년: 오늘날의 교훈
일시 : 11월 28일(수) 6시 30분
문의 : 011-1731-2177

강원대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삼성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가?
일시 : 11월 27일(화) 6시 30분
장소 : 인문대학 3호관 122호
문의 : 010-9292-5963

부산대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삼성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가?
연사 : 정종남 (투기자본감시센터 기획국장)
일시 : 11월 23일(금) 6시 30분
장소 : 사회대
문의 : 010-4569-0501

4대 사회보험노조 공동 투쟁

사회보험의 공공성과 일자리를 위한 투쟁

11월 19일 국회 재경위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 기능을 통합해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3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4대 사회보험노조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11월 19일 7천여 조합원이 모인 파업 연대 집회를 개최하며 즉각 반대 행동에 돌입했다. 이미 일부 노조는 전면 혹은 부분 파업에 들어갔으며, 21일부터는 모든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무현 정부는 통합징수공단을 만들어 '중복' 인력을 줄이면 5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고 국세청 자료를 이용해 자영업자 등의 소득을 파악해 보험료 부과와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재벌의 불법·편법 탈세를 막지 못했고, 지금도 정확한 소득 파악을 못하고 있다.

또,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통합 징수를 하게 되면 저소득층은 4대 사회보험 전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민간 보험사들이 배탈릴 기회만 주게 되는 것이다.

사회보험료를 매년 인상하면서 시장 개방과 공공성 파괴를 추진해 온 정부가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따라서 공투본이 파업에 들어가며 "국고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노동빈곤층에 대한 선진

적 복지를 달성하겠다는 정치세력만이 감히 '4대보험 통합'을 거론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전적으로 옳다.

공적 연금 재정 불안정의 근본 원인은 턱없이 부족한 정부 지원과 기업주·부자에게 유리한 보험료 징수 체계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노동자들만 구조조정하려 한다.

따라서 사회보험 노동자들의 파업은 일자리를 지키는 투쟁일 뿐 아니라, 사회보험의 공공성을 지키며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투쟁이기도 하다. 사회복지가 확



대되길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이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정부 논리의 허구를 거슬

러 노동자들의 투쟁을 분명히 지지하지 않고 있다. 혼란을 떨치고 공적 보험과 일자리를 지키려는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국회 법안 통과 저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징수 통합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권 말 정치위기 속에서 법안 통과는 불투명하다. 강력한 투쟁으로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투쟁을 계기로 사회보험의 공공성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

강동훈



“파병 재연장 반대한다!”

이 참가해 파병 재연장 반대와 자이툰 부대 철수를 요구했다

11월 18일 서울 명동에서 파병반대국민행동이 주최한 파병 재연장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공무원노조, 평화재향군인회, 평통사, 다함께, 사회당 등에서 3백여 명

버마 군부와 손잡은 게 큰 죄가 아니다?

불법으로 버마에 포탄 제조 설비와 전략 물자 등을 수출한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판결이 11월 15일 나왔다. 천연가스 개발권을 따내기 위해서 버마 군부의 피눈은 손을 잡은 대우인터내셔널에게 법원은 송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대우인터내셔널 전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현직 임원 9명에게 각각 벌금 5백만~5천만 원이 선고됐을 뿐이다.

판결 직후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은 법원 앞에서 긴급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버마 NLD 한국지부, 버마액션, 필리핀이주자 공동체 카사마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국제민주연대, 나와우리, 다함께, 민가협 등이 참가했다.

버마액션 활동가 푸라는 “대량 학살하는 데 사용될 무기를 불법 수출한 것에 대해 고작 이 정도 처벌이라니 어이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버마NLD 한국지부 활동가 조샤린은 버마 민주화 활동가들의 난민 인정에는 인색한 법원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판결은 버마 민중들과 버마 민주화 지지 전세계 민중들의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고 규탄했다.

조지영

뉴코아·이랜드 투쟁

론스타 뺏치는 사기꾼 박성수

지난주 이랜드 사측이 뉴코아 강남점 매각을 발표했다. 2004년에 강남점 3개 점포를 1천8백억 원에 산 이랜드는 두 개 동을 3천8백억에 되팔면서 무려 2천억 원을 벌게 됐다.

앞으로 10년간 영업권이 유지되는 '매각 후 임대' 방식이라 이랜드가 김스클럽을 계속 경영하지만, 노동자들의 고용은 더 불안해질 듯하다. 홈에버 분당점, 안양점, 순천점 등 3개 점포 매각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사실, 강남점 매각설은 전부터 있었다. 이랜드 그룹의 고질적인 자금 압박 때문인데, 노동자들의 굴하지 않는 장기투쟁이 큰 부담이 됐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이랜드 사측은 적어도 5백억 원 이상의 매출 손실을 입었고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월드컵점의 경우 파업 이전 대비 매출이 30~40퍼센트 감소”했다. 엄청난 빚을 끌어다 쓴 인

수합병으로 부채에 시달려 오다가 파업으로 매출까지 줄어들자, 당장의 빚 부담을 덜려고 매각에 나선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조그만 옷가게에서 출발한 박성수가 20여 년 만에 재벌로 성장한 비결이 인수합병과 매각이었다. 박성수의 수법은 투기자본 론스타 뺏칠 정도다. 엄청난 빚을 떠안고 기업을 인수한 다음, 일부를 처분해 급한 빚을 갚고, 나머지를 구조조정해서 확장하는 게 이랜드의 비결이었다.

뉴코아 인수가 그 사례다. 박성수는 법정관리로 부채가 탕감된 뉴코아를 빚을 지며 싼값에 인수했다. 이랜드는 뉴코아를 6천2백억 원에 인수한 후, 15개 매장 중 8개만 빼고 나머지를 매각 후 임대 방식으로 처분해 5천여억 원을 회수했다.

지난해 까르푸(홈에버) 인수에 동원한 1조 4천8백억 원 가운데 이랜드가 직접 낸 돈은 3천억 원뿐이었다. 투기자본에게 5천1백억 원을 끌어왔고, 8천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다. 은행들은 아직 사지도 않은 32개 까르푸 매장을 담보로 8천억 원을 빌려 줬다.

기업사냥

이런 식의 기업사냥을 거듭하다 보니 이랜드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이랜드 그룹 주력 4개 사의 단순합산 총 차입금은 2조 4천4백42억 원에 이른다. 올해 상환해야 할 차입금만 무려 9천억 원이다.

박성수 돈놀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노동자들이었다. 박성수는 인수합병 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비정규직화하고 해고해서 수익성을 높였다. 비정규직 악법은 이처럼 '한국판 론스타'의 돈벌이를 돕는 도구인 셈이다. 사측은 단협도 위반한 채 노조와 상의

도 없이 매각을 결정했다. 뉴코아노조는 즉각 규탄 성명을 내고 매각 반대를 밝혔다. 노조는 “고용보장에 대한 대안 없는 회사의 태도는 더 큰 투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거듭해서 흉악한 본색을 드러내는 박성수에 맞선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지금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낮에는 투쟁,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겹게 투쟁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하루빨리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에 대한 생계비 지급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11월 27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이랜드 투쟁 승리를 위한 간부 파업에도 노동자, 학생, 민주노동당원 등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나아가 제2차 범국민 행동의날 등을 계기로 단호한 투쟁과 조직 노동자들의 강력한 연대가 결합된 투쟁의 전진이 필요하다.

정종남

비정규 투쟁 승리 · 비정규악법 폐기
민주노총 서울지역 간부 파업
11월 27일(화) 오후 3시 대학로

삼성일반노조 김성한 위원장 옥중 인터뷰



“삼성 왕국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삼성의 범죄를 고발한 ‘죄’로 3년째 수감중인

삼성일반노조 김성한 위원장을 만나 최근 삼성 비자금 사건의 의미와 투쟁의 방향에 대해 들었다.

김성한 위원장은 11월 19일부터 이견희 구속·처벌, 울산 삼성SDI 노동자 탄압 중지, 재소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이번 수감 기간중 벌써 9번째인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삼성에 맞서 싸운 10년의 세월동안 ‘지가 억울하니 그런 식으로[증거도 없이 삼성과 검찰의 부당한 유착에 대해] 얘기하겠지’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 사람들도 저를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에도 보장된 노조 건설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삼성이 탄압하는 게 결코 정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즉별 재벌 이 씨 일가가 이 나라에 군림하며 큰소리치며 살기 위해 온갖 불법과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 불법 자금을 만들어 사회 곳곳에 뿌린 것이죠.

이번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은 삼성이 저지른 온갖 불법·부정 등이 썩어 썩아터진 것이 고름처럼 흘러 내린 것일 뿐입니다. 삼성에 맞서 범국민적 저항이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 노무현은 삼성 특검을 사실상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노무현의 오른팔이라는 이광재

의원이 삼성과의 연결 고리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노무현의 경제 정책은 삼성연 구소의 정책입니다.

지난 X파일 사건 때도 노무현은 과거는 덮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 때 저는 노무현 정권에서는 삼성 개혁을 기대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솔직히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흐지부지되거나 본질을 흐려버릴 것이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범국민적인 저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 놈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검찰·국세청·금감원 다 맛이 간 놈들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삼성이 수천억 원을 먹였는데요, 그것을 파헤치면 자기들이 다 나오니까요.

권영길 대표가 말했듯이, 아무튼 노무현이 삼성에 장악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아엎어야 합니다.

삼성의 불법을 파헤치면 경제가 위축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역사의 심판

을 받을 것입니다. 이견희 아들 재산이 4조 원입니다. 66억 원 상속받아서 14억 원 세금 냈는데 지금 4조 원이 됐습니다. 이 돈이 누구의 돈입니까. 그건 노동자와 국민의 돈입니다.

오히려 재벌의 정경유착·문어발식 사업확장·중복투자 등이 경제 위기를 몰고 오는 것입니다.

울산 삼성SDI와 삼성전자에서 노동자들이 구조조정되고 있습니다. 자기들 잘못을 노동자들을 쉽게 짜르는 데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이용해 어떻게 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2004년 12월에 일부 삼성 노동자들이 양심선언을 했는데, 그 후 삼성에 의해 재산압류, 미행, 감시, 협박을 받았습니다. 결국 삼성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소하고 어떤 사람들은 숨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삼성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런 삼성 노동자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에 노조를 건설하는 과정은 삼성이 이 땅 구석구석에 뿌린 부정부패와 모순을 이겨내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현재 울산 삼성SDI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의미는 매우 소중한 겁니다. 그동안 삼성에 맞선 싸움이 대체로 개인적 싸움이었는데 이 싸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직도 이 투쟁을 조금씩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배 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들은 저를 감옥에 가렸지만 언제나 목에 가시가 걸린 느낌일 것입니다. 어려움과 시련 너머에는 새 세상의 희망이 있습니다.

조직 건설(삼성 노조 건설)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일단 건설되면 삼성 왕국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동안 삼성 노동자들은 수없이 당해 한과 분노로 응어려져 있습니다. 삼성과 싸우는 노동자들과 함께해 주십시오.

인터뷰·정리 한규한



읽어 보십시오

《골리앗 삼성재벌에 맞선 다윗의 투쟁》

김성한
삶이보이는창



11월 16일 열린 삼성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삼성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우리를 쥐어 짠 돈을 ‘떡값’으로 썼다니!”

저는 이견희의 여동생 이명희가 경영하던 신세계 이마트에서 노조를 건설하다 해고됐습니다. 이번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를 보면서 일단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삼성 노동자들이 항상 주장해 왔던 것들이 폭로된 것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입증된 것이죠.

이번 일이 삼성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조를 건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종란(신세계 이마트 해고자)

저는 핸드폰 액정 만드는 회사인 삼성SDI 하이비트 해고 노동자입니다.

이번 삼성 비자금 사건을 보면 화가 납니다. 저희는 1백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받으며 주야 12시간씩 일했거든요. 그렇게 번 돈을 ‘떡값’으로 썼다는 게 화가 나죠.

그러나 이번 사건은 삼성 그룹의 잘못들을 다 들춰낼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삼성SDI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1천1백50명 중 7백50여 명을 외주화해서 비정규직으로 돌리고 있어요.

50대 아저씨들인 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음에는 저희들에게 엄청 욕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비정규직 문제가 자신들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노조에 대해서도 엄청 불신했는데 지금은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는 변화들이 있어요.

최세진(삼성SDI 하이비트 노동자)